

‘교구자치와 교화단자치의 조화를 위한 제언’에 대한 토론

김선명 교무(영산교당)

1. 논문을 읽고

圓覺聖尊 少太山 如來의 救世 理念을 적실하게 구현하기 위해 敎憲 前文에는 一圓主義 思想과 共和制度, 그리고 十人一團의 조직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개교 100년을 앞두고 교단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총체적 위기의 순간에 서 있다. 이러한 현실을 진단하고 해결을 위한 한 방안을 원불교정책연구소 최정풍 교무가 집필한 논문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논문은 현재 교단이 겪고 있는 장기적 교화침체와 산적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성찰에서 시작하여 ‘교화단’을 통해서 풀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요지는 결론 부분에서 밝혔듯이 다음과 같다.

[논자는 교단 구성원 개개인의 서원과 역량이 마음껏 발휘되고 그 가운데 교화, 교육, 자선으로 대표되는 교단의 성장도 이루며, 교단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시대적 과제들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며 개교의 동기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교화단’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화단을 통해서 공부하고 소통하고 교화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행정 서비스 중심의 교구사무국을 행정구역별 법인사무국으로 규정하고 향단 사무국을 신설하여 교단의 본질적 존립 이유인 공부, 교화, 친애의 가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촉진시킨다. 또한 교화단을 교단의 핵심 조직으로 하고 십인일단의 개별 교화단도 10인 각자가 자기 고유의 업무와 전문 분야를 가지고 기능하며 역할할 수 있도록 재조직하자는 것이다.

그럼으로 인해 기존의 수직적 위계질서 조직을 수평적 협력조직 문화로 바꾸며, 궁극적으로는 급변하는 교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대사회 교화에 적극적으로 역할하는 교단으로 거듭나도록 하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논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원불교정책연구소에서는 그동안 교단의 현실진단과 이를 통한 해법을 위해 교단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여론조사를 해 왔다. 그리고 이를 분석하고 연구하여 이번 세미나를 통해 다듬어 정리하고 장차 정책제안을 준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한 과정과정마다의 수고로움을 미루어 짐작할 뿐이지만, 애둘러 원불교정책연구소 임직원들의 노고에 고마움과 박수를 보낸다.

2. 생각해 볼 몇 가지 관점에 대하여

1) 지구를 저단으로, 교구를 향단으로 대체하는 변화를 주장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교구조직을 교화단조직으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교정원의 교정지표 네 가지 중 하나가 ‘교구자치화’이고 금년까지 8개 교구가 법인을 분리하였다. 교구자치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화단자치를 들고 나왔는데, 논문 말미에도 적시되어 있듯이 현 교정원의 역점 사업으로 시작되고 있는 교구자치제를 실제 시행을 통한 검증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교구자치제는 폐지나 다름없이 밀어내고 교화단자치제를 들고 나와 오히려 혼란을 주는 것은 아닐까?

2) 교구자치제가 가지는 현실과 한계를 밝히고, 교화단자치제가 가지는 긍정적인 면만을 적고 그 한계나 역기능을 적시하지 않은 면도 생각해 봐야 한다. 이는 교화단자치제의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한 방책으로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교구자치제 속에도 이미 행정에서 재정까지 충분한 자치권의 틀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있고, 논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제기하고 있는 교구자치제의 문제점들은 교구자치제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아직 본격 시행도 하지 않은 교구자치제에 대해 이전부터 있었던 것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함으로써 논리의 비약 또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결국 행정조직(교구)과 교화조직(교화단)의 조화로움으로 시너지를 내는 것이 과제일 것이다.

3) 논자는 교구자치제에 대해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중앙, 영광교구 제외) 확정이 됨으로써 규모의 편차가 불가피하게 있어지고 더불어 운영상에서 와지는 관성화와 경직된 현실을 지적하고 교화단자치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였다. 현재 교구제가 가지는 규모의 편차를 10인 1단의 저단을 9개씩 묶어 향단으로 만들어 통일을 주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교화와 공부 그리고 소통이 가능하리라고 하였다.

그런데, 교당과 기관이 인접한 향단과 저단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1군에 1교당 정도인 강원도나 경상도,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고 공동교화 부분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4) 기존의 교구사무국을 없애고 향단사무국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교화단 조직운영은 상관없다할지라도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와 업무상 관계할 때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 예컨대 현재 교구제는 광역자치단체와 편제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교류가 쉽지만, 향단 체제가 되면 자치권을 부여받은 향단사무국이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가 되고 반대로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향단사무국이 2개 광역자치단체를 관할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서 오히려 효율성이 기존의 교구제보다 떨어질 수 있다.

3. 짧은 의문들 몇 가지

1) 향단을 90여명으로 편성하고 9명의 저단장을 비밀투표로 뽑는다고 했는데, 범위나 범람을 무시하고 완전한 지자분위 정신에 의해 뽑는다는 것인가?

2) 교화단자치를 실시하여 향단사무국 체제로 전환되면 기존의 교구사무국은 없어지는데, 오히려 사무국이 숫자상으로는 더 늘어나게 됨으로써 인력배치에 어려움은 가중되지 않을까?

3) 중앙총부의 조직은 어떻게 편제할 예정인가?